

## “같이 밥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안다”

태평로

황대진

논설위원



작년 추석 즈음 여야 초선 의원들이 식사 회동을 가질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모임 이름도 ‘정치를 위한 식사를 합니다’라는 뜻으로 ‘정식합니다’라고 지었다고 했다. 모처럼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 측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문을 내며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모임을 추진했던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그쪽 지지자들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과 식사를 시도했는데, 중진은 만나봤지만 초선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종진 의원은 “지금 우리 당 초선은 물론, 일부 재선 의원도 야당과 사적으로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밥 먹는 건 고사하고 과거 흔했던 여야 공부 모임도 없어졌다. 이들이 3선, 4선 될 때쯤엔 교류가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정말 큰일 아니냐”고 했다. 상대방과 만나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예전 정치권 표 현으로 ‘사쿠라’, 요즘 민주당 말로

‘수박’으로 찍히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찍히면 더 이상 공천을 받기 어렵고, 초선으로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야 공통으로 선수가 낮을수록 지지층 눈치를 더 많이 본다

강성 지지자 눈치 보느라 여야 식사·공부 모임 사라져 의원들 제명·징계안만 96건 추석맞이 식사 한 끼 어떤가

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반(反)헌정 범죄”라고 한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소속 의원들이다. “헌법기관의 지위를 악용해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부의 최종심 판결까지 부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여야를 합치면 의원 60명을 국회에서 쫓아내야 한

다는 주장이다.

제명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다. 그래서 절차가 헌법에 직접 규정돼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엄격한 조건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제명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일은 부마 사태로 이어졌고 결국 유신 정권의 몰락을 불렀다.

제명까지는 아니지만 품위 실추 등을 이유로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낸 것도 36건에 이른다. 현재 국회의원이 298명인데 제명과 징계안을 합치면 96건이다. 역대 국회에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이 되레 갈등을 조장하고 없던 문제를 새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을 추측하는 여야 의원이 만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초선이 많이 꺼낸 좋겠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동료끼리 밥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이해 못 하는 지지자가 있다면 진정한 지지자가 아닐 것이다. 또 지지자 무서워 밥도 못 먹는다면 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도 야당과 식사하고 대화했다.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더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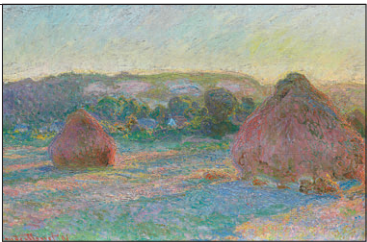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01]

### 모네를 매혹시킨 노적거리

1883년 화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1840~1926)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 지베르니로 이사했다. 파리 근교에서 집세가 밀려 자식 여덟을 거느린 채 길거리로 나왔기 직전이었다. 지베르니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에 연중 비가 고르게 내려 꽃과 풀이 잘 자라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물론 무엇보다도 집세가 싸다.

1890년 여름, 모네의 이웃집에는 수확한 곡식을 탈곡하기 전까지 비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쌓은 노적거리가 있었다. 모네는 태산처럼 높이 쌓은 노적거리를 바라보다 그 빛과 색이 시시때때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에는 캔버

스 두 개를 두고 각각 맑은 날과 흐린 날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다. 하지만 맑은 날이라고 해도 시간이 다 갈라지면 색이 계속 변했고, 계절이 바뀌면 또 다른 빛과 색이 보였다. 완벽주의자 모네는 그렇게 이듬해 겨울까지 수개월 동안 단 몇 분에도 달라지는 순간의 분위기를 포착하려 나섰다. 그는 한 수레에 캔버스 10여 개를 싣고 밭으로 나와, 캔버스를 계속 바꿔가며 그림을 그렸다. 1891년 5월, 그렇게 공들여 완성한 노적거리 연작 15점의 시장에 내놓기 기도 전에 팔러나가기 시작했다. 덕분에 모네는 세 들어 살던 저택과 정원의 주인이 됐고 곧이어 수련이 가득 핀 연못까지 사서 죽을



클로드 모네, 노적거리: 늦어름, 1890~1891년, 캔버스에 유채, 60×100.5cm,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 소장.

때까지 거기서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

이쯤에서 궁금한 건 왜 노적거리가 여름부터 겨울까지 그대로 서있었는지다. 당시 농촌에서는 탈곡기 한 대가 온 마을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순번이 와서 수확을 마무리하려면 1년도 기다려야 했다. 어찌된 모네에게 몇 개월간 한자리에서 탈곡기를 기다리는 노적거리는, 생존을 위해 비바람도 무작정 참고 버티는 끈기의 상징이었는지 모른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 社說

### 이공계 매년 580만명 배출 中, 1년 출생 23만명 韓은 의대로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 <6>

‘짜퉁의 나라’ 취급 받던 중국이 불과 10여 년 만에 한국을 추월해 미국을 위협하는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젊은 인재 대군’이 있다. 중국도 저출산을 겪고 있지만, 매년 이공계 대졸자만 580만명 배출한다. 한국과 근본 체력 자체가 다른 것이다. 저출산에 더해 반도체 계약 학과 학생들마저 의대로 이탈할 정도로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겪는 한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

중국의 실리곤밸리 선전(深圳)은 인구 1700만명의 평균 연령이 33.6세다. 서울(45.2세)이나 창원(45.8세) 등 한국 도시보다 훨씬 젊다. 최대 빅테크 업체 화웨이는 전체 직원이 21만명인데, 연구·개발(R&D) 인력이 11만400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한국 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전체 임직원을 합친 수(3만3000명)의 4배에 가깝다. 화웨이 연구원들 평균 연령은 27세다. 한국 통신 3사 연구소는 40대 중·후반이 주축이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R&D 인력은 2만6000여 명이고, 절반 이상이 20대다. 한국 대기업에서는 젊은 20대 직원 수가 부장·임원급인 50대보다 적어지는 세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서 엄청난 숫자의 20대 청년들이 밤낮없이 연구하는 중국과 그 반대인 한국. 기술 전쟁의 승패는 이미 여기서 갈리고 있다.

지금 중국의 20·30대는 부부당 자녀 1명만 허용하는 시대(1978~2016년)에 태어나 부모의 전폭적인 교육 지원을 받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젊음은 그 자체로 혁신과 동의어다. 기존 관성을 벗어난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기술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젊음이다. 지식은 폭발적으로 융합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중국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한국은 0.75명)으로 떨어질 정도로 저출산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큼 심하지 않은 데다 14억 인구라는 절대적 규모가 충격을 완충하고 있다. 작년 중국 출생아 수는 954만명으로 한국(23.8만명)의 40배였다. 중국의 1년 이공계 대학, 전문대 졸업자가 580만명이다. 한국 1년 이공계 대졸자는 14만명 정도다.

중국 이공계 인재 양성은 공산당의 일관된 계획 아래 이뤄지고 있다. 2025년까지 고급 기술 인력 1000만명 양성 계획부터, 대학에 AI·로봇·반도체 특화 커리큘럼 도입을 지시한 ‘제조업 인재 발전 계획 지침’, 칭화대 등 명문 대학 15곳을 지정해 AI 특화 교육에 들어간 ‘AI 101 계획’까지 모든 정책이 하나의 목표를 향했다. 바로 ‘기술 굴기’다.

국제 과학 올림픽이드 수상자 등 영재를 대입 시험 없이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바오송(保送) 제도’는 천재급 유망주들이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인재 양성 전략은 초기에는

해외 유학과를 다시 불러들이는 데 집중됐다. ‘천인계획’ 등을 통해 서구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과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해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좁혔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류가 바뀌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AI 모델 ‘딥시크’를 개발한 왕원평과 그의 팀은 모두 중국 본토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순수 국내파다. 이제는 외부 수혈 없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매년 국내에 서만 5만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축적된 연구 인력의 양은 연구 수준의 질을 끌어올렸다. 과학기술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에서 중국은 2023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격차를 더 벌리며 2년 연속 정상을 자켰다. 글로벌 상위 10개 연구 기관 중 중국과학원(1위), 중국과학기술대(3위), 저장대(4위), 베이징대(5위) 등 8곳이 중국이다. 중국 이외에 10위권에 포함된 곳은 미 하버드대(2위)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9위)뿐이다. 한국 서울대는 52위, 카이스트는 82위에 그쳤다. 논문의 수준을 평가하는 ‘상위 1% 파인용 논문’ 수에서도 중국은 2022년 미국을 넘어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중국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없다”던 서방의 조롱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중국의 인재 양성 배경엔 자본주의보다 더 철저한 ‘성과주의’가 있다. 중국은 ‘인간의 욕심을 말라한다’는 공산당식 이념을 오래전에 버렸다. 화웨이는 “인간의 욕망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順人欲)이 리더의 도리”라며 최고의 성과에 최고의 보상을 약속한다. 좋은 성과를 낸 BYD 엔지니어 연봉이 7년 만에 3600만원에서 2억1600만원으로 경종 뛰어오를 정도로 파격적이다. 중국 명문대 이공계 박사의 초봉은 2억원을 훌쩍 넘는 다. 중국 대졸자 초임(약 1200만원)의 16배가 넘는다.

파격적인 보상 시스템이 있기에 중국의 젊은 인재들은 ‘주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0일간 분투하자’는 CATL의 ‘896’ 같은 고강도 업무를 감내한다. 휴식보다 성취를 택한 이들의 땀방울이 미국의 기술 붐쇄를 뚫는 동력이 된 것이다.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오후 6시면 전원과 컴퓨터가 꺼지는 한국 연구소와 전혀 다른 현실이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겪는 한국이 인구가 28배 많은 중국과 인재의 양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이 아닌 질, 전면전이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맞서야 한다. 고(故)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미 20여 년 전에 “21세기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20만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인재경쟁의 시대, 지적 창조적 시대”라며 S급(특급) 인재 양성을 역설했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먹여 살릴 핵심 기술 분야를 정하고, 그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고 인재에게 중국보다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인재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지고 있다. 더 밀리면 미래는 없다.

### ‘실세 비서관’ 국회 출석 막으려 보직까지 바꿨나

대통령실이 29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한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 일정을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 후임은 공개하지 않았다. 후임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김 비서관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김현지 실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출석 문제로 논란이 됐다. 오랫동안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빠진 전례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증인 명단에서 ‘김 비서관’을 제외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자리여서 국감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 총무비서관은 국감장에서 ‘정윤호 문건’ 의혹, 윤석열 정부 총무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민주당 추궁을 받았다. 민주당은 김 비서관 대신 “비서실장 등이 출석하면 된다”고 했다. 비서실장이 아랫사람인 비서관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과 달리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워크숍에서 행정 혁신 사례로 김 비서관 실명을 거론했다. 총무비서관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돌연 부속실장으로 발령 낸 것은 국회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실장은 ‘실세’라는데도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이 대통령을 시민운동 시절부터 줄곧 보좌해왔다는 것이 전부다. 1급 공무원이지만 나이, 학력, 경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도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국회에 나와 검증받을아야 한다. 그래야 훗날 정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세 비서관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도 부를 수 없다고 한다. 국감이 끝나면 김 부속실장을 다시 총무비서관으로 복귀시킬 것인가.

부자, 인재, 돈, 기업이 떠난다

## 기업 못 잡아먹어 안달인 나라 ... 인구 대비 부자(富者) 유출 세계 2위!

민노총 안하무인 횡포, 통제커녕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고 | 말도 안 되는 상속세 구조, 악랄적·징벌적 수준 | 베네수엘라 식 좌익 전체주의 국가 행(行) 우려



부자, 인재, 돈, 기업이 떠난다

◀ 기업이 대한민국이다. 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난다면? 대한민국 망한다. 김정은과 시진핑만 살만 난다. © 황영성 기자

#### 누가 국내 투자 늘리려 하겠는가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2025년 부(富)의 이동》 보고서를 내놓았다. 유동성 투자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14만 2000명이 거주 국가를 옮길 것으로 전망했다. 순유출 예상 1위 국가는 200년 넘게 유지돼온 비거주자 세계 특례를 지난 4월 폐지한 영국. 2위는 중국, 3위는 인도, 4위는 한국. 작년의 2배로 급증했다. 한국의 《부자 해외 유출》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영국에 이어 세계 2위.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관세전쟁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기업을 옥죄는 악법이 양산되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심각한 위기감을 호소한다. 기업 CEO 친구 두 명, “이렇게까지 기업하기 어려운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외환위기가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또 다른 기업인, “한국에서 공장 신설이나 증설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이 《민노총 권력》의 안하무인적 횡

포를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고 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나라가 됐다. 제정신 박한 기업인이라면 누가 국내 투자를 늘리려 하겠는가. 상속세 때문에 절실한 중견 중소기업 오너들이 피담 홀려 키운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 사모펀드 등에 팔아넘기는 심정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 칼만 안 들었지, 국가 주도 강탈

이재명 정권과 비슷한 급진좌파 문제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한국의 해외 이민은 1년 전보다 3.2배로 급증했다. 국적 포기자도 크게 늘었다. 이재명 정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 탈출》을 고민하는 한국인 중에는 중산층 이상 고급 인적 자원이 많다. 부자도, 인재도, 돈도 떠나는 나라. 그런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외이주에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럼에도 《탈(脫) 한국》이 급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최고 50%(기업 경영권 할증엔 65%)에 달하는 악랄적·징벌적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상속세 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국가 주도의 강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상속세와 무관한 증산층까지 해외이주를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위적 자력도 없는 저질의 급진 좌익 전파자들이 줄줄이 고위직을 장악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失政)이 불려를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일지도 모른다. 좌익 전체주의 국가로의 길, 자칫하면 한반도 전체의 적화 와 피비린내 나는 대규모 숙청이 재연될 가능성. 그럴 가능

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은 아닐까. 상당 기간 잊고 살았던 공산화와 인민제관의 끔찍한 결과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심상찮은 상황이다.

#### 베네수엘라 닮아가는 한국

남미 최대 부국 베네수엘라는 1999년 이후 차베스-마두로 급진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사회주의 실험 25년을 거치며 완전히 망가졌다. 전체 인구의 약 11%인 340만 명이 모국을 떠났다. 부자들에게 이어 생존이 힘들어진 일반 국민도 탈출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성매매 외국인 중 99.8%가 베네수엘라 여성. 이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 의사 등 고학력 전문직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재명 정권의 포퓰리즘 국정 운영이 계속될 경우,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길》을 뒤따르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한화 HD현대 두산 같은 대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진국 같으면, 규제는 적고 인건비와 세금 부담은 적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고도 여러 번 옮겼을 상황이다. 한국은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떠나는 돈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갈 가능성이 크다.

#### 기업 때리기, 나라 몰락 전조 증상

글로벌 기업 소년의 공동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 “미래의 기업은 조국의 열망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윤이 가장 크고 규제는 가장 적은 곳으로 이동할 것”. 일부 매스컴과 좌

파 지식인들의 《기업 때리기》에 대한 비판이었다. 영국 저널리스트 존 미클스웨이트의 책 《기업의 역사》, “한 국가가 자랑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숫자가 그 나라 군함의 숫자보다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로서 보편타당성이 훨씬 크다”. 저명한 경제학자 이토 모토시게 전 도쿄대 교수, “막강한 실력의 기업을 얼마나 보유했는지가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 “위대한 기업가들이 유럽과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부자와 인재와 기업이 떠나는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호오(好惡)와 별도로 세계무대에서 뛰는 기업인들이 많은 나라와 없는 나라는 천양지차이다.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유능한 국가지도자와 공직자들, 기업인과 근로자가 함께 힘들게 일궈낸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 이 시대 착오적 퇴보를 막지 못한다면, 고급인재-부자-자본의 한국 탈출은 견잡을 수 없이 가속화하고, 한국은 급진적화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9월 28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77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